



주간통일정세 2009-08(2009.02.16~2009.02.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0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함북지역 연이를 시찰(2/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7월 7일 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기술개선 상황과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소가 “대규모의 화학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강조한 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그는 “기업소의 지도일꾼들이 생산자의 창발성을 발양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히 진행하는 한편 절약투쟁을 강화해 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
- 시찰에는 홍석형 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노동당 중앙위 부장들인 박남기, 장성택과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주규창 등이 수행

● 김정일, 김책제철-라남기계 시찰(2/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차례로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먼저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을 방문, 최근 새로 설치된 대형산소분리기 등을 돌아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라는 구호를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한 결과”라고 치하하면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철생산 체계”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해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최고생산 수준을 돌파하고 기계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을 과제로 제시
- 시찰에는 홍석형 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 리재일 등이 수행

● 北이끌 ‘셋별장군’(2/16, 노동신문; 2/17, 마이니치신문; 2/18, 연합)

-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7일 “북한군 중추기관인 총정치국이 1월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정운(26)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내용



의 전문을 내렸다”고 보도, 그러나 통일부는 18일 “김정은 후계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언급

- 북한군 사상 검열을 담당하는 김정각(대장)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2월 초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천하면서 “만경대 혈통과 백두산 혈통을 총으로 보위하자”고 언급
- 노동신문도 16일 김 위원장 생일을 맞아 사설에서 “백두 혈통의 계승 속에 주체 혁명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며 ‘혈통 승계’ 문제를 거론하기도 함.

나. 정치 관련

● 北, 대의원선거 선거자 명부 공시(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월8일 치러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구, 분구 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선거자 명부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시행세칙에 준해 작성됐으며, 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됐다”고 통신은 보도, 선거자 명부의 작성과 공시는 선거일 15일전에 하게 됨.
-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월6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의원 선거에 대한 결정을 채택,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오는 3월8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월14일에는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들을 조직했고, 2월1일부터는 구, 분구 선거위원회가 조직돼 선거를 위한 준비에 착수

● 北, 통일고문회의 보수인사 재편 비난(2/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2일 ‘사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 고문단 교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 참가자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내쫓고 대결 광신자들을 앉힌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동족대결 책동”에 의해 지금 남북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는 험악한 지경에 빠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통일고문회의를 비롯해 북남관계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을 대결광신자들로 꾸린 것만큼 북남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

● 北, 玄통일 취임사 비난(2/21,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월12일 취임사에서 ‘원칙고수’, ‘비핵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강조한 데 대해 “반통일적인 궤



- 변"이라고 비난하면서 "우익 보수적 통일관"을 가진 현 장관이 자리에 있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풀릴 수 없다"고 주장
- 통일신보는 21일 '대결의식에 물젖은 자의 궤변'이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남북관계는 "완전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날로 짙어가고 있다"면서 현 장관이 "이렇듯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남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공존, 공영정책'이라고 추어올리면서 갖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야말로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거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
 - 신문은 현 장관에 대해 "조국통일과 북남관계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 "동족대결의식이 짙은 반통일분자" 등으로 공세를 퍼면서 그의 통일장관 임명과 관련, "북남관계를 완전 파산으로 더 깊숙이 몰아가려는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현 장관이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비핵·개방·3000'(구상)은 '상생·공영'(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좋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공화국 대결기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 끝까지 결판...실천으로 보일 것(2/21,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끼 걱정 사회주의' 언급을 거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악담"이라고 격하게 반발하며 "우리는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결산으로 역적 패당과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
- 1월30일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던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또 "앞으로 시간은 리명박 패당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

●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2/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이 겸임하고 있는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오극렬(78·대장) 노동당 작전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공군사령관 출신인 오 부위원장은 총참모장 당시 북한군 현대화를 주도,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던 1987~88년 당시 실세였던 오진우(원수) 인민무력부장과 군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좌천됐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보호로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짐. 그는 일제 말기 '김일성 부대' 대원이던 오중성의 외아들로, 어릴 때 김 위원장과 형제처럼 함께 자란 것으로 알려짐.
 - * 당 작전부장은 대남 간첩 양성과 침투를 총괄하는 자리이며 국방위는 북한군을 지휘하는 사실상 최고통치기구임.
 - * 오 부위원장은 1989년부터 20년 동안 당 작전부장을 지내며 1992년 여간첩 이선실(북한 서열 22위)이 개입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2인조 무장간첩 사건, 1999년 여수 앞바



다 반잠수정 침투 사건 등을 주도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힘. 1979~1988년에는 총참모장(합참의장)으로 일하면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등에도 연루됐을 것이라 관측

-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2/19, 조선중앙TV)**
 - 북한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선중앙TV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한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 결의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일철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호칭
 - 인민무력부에는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제1부부장 자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2월11일 김영춘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면서 전임 김 부장의 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한 것으로 추정됨.
 - 김 전 인민무력부장은 1997년 인민무력부가 정무원 산하 기구일 때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이미 지냈으며 1998년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상에 올랐다가 2000년 인민무력성이 인민무력부로 개명된 뒤부터 올해 2월까지 인민무력부장을 지내다가 다시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셈임.
 - 김 제1부부장은 2월1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포병사령부 산하 제681군부대의 포사격 훈련 참관에도 동행한 것으로 사진을 통해 확인됐었음.
 - 김일철 제1부부장은 해군 출신으로 해군사령부 참모장과 해군사령관을 지냈으며 공화국 영웅칭호와 국기훈장 등을 수훈

- **北, 남북간 물리적 충돌 시간문제(2/19, 조선중앙통신; 2/18, 총참모부 대변인)**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 호전광들 비행대들을 기동전개, 북침전쟁연습 감행’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무력증강과 북침전쟁 연습”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은 “시간문제”라고 주장
 - 북한은 18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남한 정부에 대해 북한군이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특히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괴뢰군 호전광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게 됐다”고 통신은 보도



- **평양방송, 서해상 등 군사충돌 위험 정세(2/1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9일 ‘반역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 프로그램에서 남북관계 악화로 서해상 등 남북간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이 최후 목표’ 발언을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모독하고 북침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기용도 문제 삼음.

- **北단체, 용산참사 비난(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17일 용산참사를 “인권말살”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대의원선거 일심단결 보일 것(2/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는 선군조국’ 제목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심단결’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제 멀지 않아 진행되게 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서도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의 천만리 길을 역세계 걸어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

- **北, 김정일생일 ‘백두혈통 계승’ 강조(2/16,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부강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라는 제목의 장문의 사설에서 “백두의 혈통의 빛나는 계승 속에 주체혁명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며 고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을 가리키는 “백두의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갈 것을 강조
 - 노동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 영도사는 백두의 전통을 우리 조국과 혁명의 만년재보로 빛내어”온 역사라며 “전통계승 문제는 혁명의 명맥과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라고 주장하고 “수령(김일성)이 이룩한 업적과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길에 조국과 혁명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
 - 한편 15일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열린 데 이어 4.25문화회관과 평양체육관 광장에서는 평양시 청년학생의 경축무도회가 열렸고 혜산시, 신의주시, 사리원시, 원산시 등 각 도 소재지에서도 무도회가 이어짐.
 - * 북한은 1976년 2월 김 위원장의 생일을 정식 휴무일로 지정한 데 이어 1995년 2월 53회 생일을 맞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면서 생일 휴일을 16, 17일 이틀로 늘렸음.



다. 경제 관련

● 조선엑스포닷컴, 온라인게임 홍보(2/22, 연합)

- 북한이 직접 제작해 운영하는 ‘조선엑스포닷컴(www.chosunexpo.com)’은 홈페이지에서 최근 개발했다는 카드, 로또, 릴, 보드, 퍼즐 등의 게임을 선보였는데 이들 게임은 남한이나 해외동포 네티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나 사이트에서는 직접 게임을 이용할 수 없으며,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게임들을 이용 또는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음.
- 사이트는 카드 게임으로 남한에서 유행하는 ‘고스톱’을 비롯해 “포커 게임을 슬롯머신 형식으로 재현한” 비디오 포커, 세븐 포커, 하이로우, 홀라 게임을 소개
- 특히 태왕사신기 게임은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일대기를 소재로 만든 역사 판타지 게임으로, 남한에서 2007년 ‘한류스타’ 배용준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작품과 동일한 제목, 주제로 구성돼 있음.
- 또 사이트는 보드 게임 화면에선 남한의 여성그룹 ‘슈가’의 전 멤버였던 박수진 씨 사진을 내세웠는데 박씨 측 기획사는 22일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해 북측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조선엑스포닷컴은 평양 주재 외국대사관들에 인터넷망을 공급하는 조선북권합영회사가 제작한 것으로, 북한의 상품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소개, 인터넷 주소(IP)상 중국 광둥성의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로 서버가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北, 2009년 외부 식량 179만t 도입 필요(2/20, 유엔식량농업기구)

-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북한은 오는 10월까지 총 178만6천t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힘.
- 20일 FAO가 최근 발간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는 지난 2년간 북한의 곡물 수확이 급격히 줄어 심각한 식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FAO는 올해 곡물 회계연도(2008년 11월-2009년 10월)에 북한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178만6천t의 식량 가운데 1월 중순 현재 45만t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134만t을 추가로 지원받거나 상업적 거래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
-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작성한 쉐팡 박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지난해 곡물회계연도(2007년 11월-2008년 10월)에 총 77만t을 수입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한다 해도 외부에서 57만t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추산
- 한편 통일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는 548만인 데 비해 전년도 생산량은 431만(도정 후 기준)이어



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17만t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노동신문, 과학기술은 중산의 열쇠(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기초’라는 글에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해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어나가는 것이 현 시대 경제발전의 기본 추세”라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
- 신문은 과학기술이 “생산 장성의 기본 열쇠”라며 “생산을 빨리 늘여야 경제와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수 있다”고 강조

● **유럽기업단 방북, IT·농업투자 모색(2/18,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 사업단이 오는 5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2008년 10월에도 유럽 사업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올해는) 더 다양한 나라와 분야의 기업들이 동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정보기술(IT)과 농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북한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
-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 유럽 간 긴장은 없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사업체가 진출하는 데 영향은 없다”며 “지난해 방문 때도 그랬지만 북한 당국은 유럽 기업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답변

라. 사회·문화 관련

● **광명백과사전, 9·10권 발간(2/21, 통일신보)**

- 북한이 2010년 완간을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발간 중인 ‘광명백과사전’(전 20권)의 9권 ‘세계의 지리’편과 10권 ‘수학’편이 발행됐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 통일신보는 21일 백과사전출판사가 광명백과사전 9권, 10권을 최근 발행했다면서 ‘세계의 지리’편에서는 세계지리 일반지식을 설명하면서 대륙 또는 대주 범위에서 지리부문별 체계에 따라 개괄 서술했으며, ‘수학’편은 수학의 기본 내용과 발전 역사를 4개 편, 28개 장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서술했다고 보도
- 또 광명백과사전은 백과사전출판사가 펴낸 기존의 ‘조선대백과사전’(전 30권)과 달리 자모순이 아니라 분야별 체계에 따라 용어를 정리,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

● **北, 10여개 습지 ‘보호구’ 지정 관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평안남도 문덕과 함경남도 금야를 비롯한 동서해안의 10여개 습지들을 보호구로 설정하고 보호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북한은 진펄, 늪, 강, 호수를 비롯해 특히 “썰물 때 깊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바닷가 연안지역” 등을 습지대에 포함시켜 보호관리하고 있다며, 습지 보호구들에선 사냥이나 비법적인 경제개발 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서식 동물들에 대한 보호 관리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

● **우리민족끼리, 김옥균 ‘교통운수 발전론’ 중점소개(2/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가 개화파 우두머리로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1851-1894)이 근대화를 위한 사회경제 개혁론을 폈던 ‘치도략론’을 “진보적인 개혁안”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자세히 소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05년 3월 김옥균을 단군, 동명왕, 이순신 등과 함께 ‘역사인물 36인’에 선정, “김옥균은 개화파를 이끌어 갑신정변을 일으킨 부르주아 개혁운동가”라고 소개하는 등 북한은 김옥균에 대해 매우 후한 평가를 한 바 있음.

● **北주민, 자유시장 제한에 반발(2/20, USA투데이)**

- 북한 당국이 일부 허용해온 자본주의식 자유 시장을 최근 제한하려 하자 북한 여성을 포함한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고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0일 보도

● **北, 런던올림픽 대비 시동(2/20, 조선신보)**

- 북한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이상의 메달 획득”을 오는 2012년 런던올림픽 목표로 삼고 올해를 런던올림픽을 향한 “선수 강화의 제1단계의 해”로 규정,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0일 소개
- 또한 “무엇보다 힘을 쏟는 대회는 종합경기 대회”라고 신문은 말하고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5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 23개 종목 중 남자 축구, 마라톤, 사격, 역도, 유도, 수영, 육상 등에 출전한다고 보도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의 김우라(41) 책임부원은 “출전 종목 수를 늘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소수정예로 집중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언급
- *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북한은 유도(8월), 남자권투(8월), 레슬링(9월), 체조(10월), 역도(11월) 등에 선수 파견을 예정

● **마약밀매 2002년 이래 중단(2/19, 유엔 마약범죄국; 교도통신)**

- 유엔 마약범죄국(UNDOC)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국장은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주요 마약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관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면서 “(그런 관행은) 지난 2002년 이래 중단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



● **北 선거 앞두고 보안경계 강화(제266호, 오늘의 북한소식; 2/18, 좋은벗들)**

- 북한이 3월 8일 실시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투표장 인근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18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66호에서 북한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행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선거장(투표장)을 비롯한 장소에서 불순적대 분자들이 선거장 파탄 행위를 하는 정치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보위부와 보안서에서는 군중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언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美국무부, 보즈워스, 성 김과 협력(2/20, 美국무부)**

- 미 국무부는 20일 대북특사로 임명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가 성 김 북핵 특사와 북핵 문제 전반에 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일상적인 접촉과 의논을 하게 될 것이고, 보즈워스 특사는 미국 국무부의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을 조정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북·미 양자대화 無언급(2/20,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일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해결만 강조할 뿐 북·미 양자대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라며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北HEU, 비핵화 걸림돌은 안돼(2/20, 폭스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우리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파악해야겠지만, 이 문제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불능화하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는 안된다”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HEU와 관계된 것이 북한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수입됐는지는 우리가 북한에 조사단을 보내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며 “그러나 이 문제로 플루토늄에 대한 우리의 통제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강조, 또 “HEU를 연구한 많은



사람은 (북한에)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구체적인 장소는 물론 구체적인 결과를 꼬집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클린턴, 우리 행동은 북의 결정에 달렸다고 언급(2/20, 연합)**

- 20일 미국 오바마(Obama)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클린턴 장관은 “한·미 양국은 그 어느 주제보다 북한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다.”라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남북 대화 없이는 미·북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은 제쳐두고 미국과 통한다) 기도에 썩기를 박는 한편 핵·미사일 도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짐.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6자 회담에 피해를 주는 모든 도발적 행동을 종식해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과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비침.

● **클린턴, 현재로선 김정일 만날 의향 없다(2/20,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현재로선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언급, 클린턴 장관은 “방북과 관련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검토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건은 북미관계가 진전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
-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고려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추구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

● **클린턴, 김정일 후계 발언(2/19; 2/20, 연합)**

- 클린턴 장관은 19일 방한에 앞서 가진 기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후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등 많은 우려에 직면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리더십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그는 또 “권력 승계가 일어나면 그것이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더 도발적인 행위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권력 내부에)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체제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면서도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말 의미 그대로 두고 싶다”며 “그는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언급



● 미, 對北정책 최종목표는 비핵화(2/17,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17일 대북정책의 최종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임을 거듭 재확인,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이 우리 정책의 기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 이어 두기드 부대변인은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90년대 시작한 2기의 경수로 건설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지와 관련해 “대북 정책을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주북 中대사, 김정일 방중 3돌 기념연회(2/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3주년을 맞아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21일 주북 중국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연회에는 북한 측에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광호 노동당 부장, 김태종 노동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 부문 일꾼들이 초대됨. 류 대사는 연설에서 올해 “중조(중국-북한) 친선의 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최태복 비서는 올해 양국의 친선이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화답
- * 김정일 위원장은 2006년 1월 10~1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

● 北·中 문화협정 50돌 연회 개최(2/21, 평양방송)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문화성이 20일 평양 청류관에서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를 초청, 북한과 중국 간 문화협조협정 체결 50돌 기념연회를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21일 보도
- 연회에 북한 측에서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한철 문화성 부상,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1월 남북교역 작년 대비 20% 감소(2/22, 통일부)

- 1월 남북 교역규모가 작년 1월에 비해 19.6% 감소했다고 통일부가 22일 발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남북교역은 반입 6천900만 달러, 반출 4천400만 달러로 총 1억1천3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1월(1억4천50만4천 달러)에 비해 19.6% 줄어들었음.



- 통일부는 남북교역량 감소 배경에 대해 “고환율과 국내 경기 침체, 북한의 지속적인 남북관계 상황 악화 조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
- **北리종혁, 선언 일부, 이행 문제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2/18, 연합)**
 - 북한의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 정상선언의 “일부 조항은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
 - 북한의 초청으로 최근 방북했던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등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한 후 내놓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리종혁 부위원장은 북영친선의원단 위원장 자격으로 엘튼 의원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남 대화의 조건으로 남한이 두 선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들며 이같이 언급
 - 연합이 18일 엘튼 의원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입수한 이 보고서는 리종혁이 두 선언의 일부 조항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두 선언에 대한 반대는 (남한) 새 정부의 남북통일 반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두 선언을 거부한다고 주장
- **민간단체 대북사업 기금지원신청 접수(2/17, 통일부)**
 - 통일부는 17일부터 국내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 통일부는 17일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공고를 내고 3월 5일까지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단체들로부터 개별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 2009년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 사업과 단체들 간의 합동사업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180억 원을 책정한 정부는 신청 접수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심사 과정을 거쳐 3월말 또는 4월 초 기금지원 사업 및 액수를 확정할 예정
 - 통일부가 발표한 2009년 기금지원 심사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남북왕래 등 지속적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기금을 지원키로 함.
 - 그러나 북측과 사업협의 창구가 개설되지 않거나 사업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단체, 전년도 기금 집행률 40% 이하의 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제한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허철 “6자, ‘비핵화 우선’ 이의없어”(2/22)

- 허 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산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제3차 실무그룹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허 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미·일 3국이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고 중·러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허 단장은 제3차 실무회의에 언급,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2차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양해가 이뤄지는 등 유익한 회의였다”고 소개했다.
- 그는 또 “북한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다든지 강경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 허 단장은 “비핵화 우선 원칙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다음 실무회의도 비핵화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열게 될 것”이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우리 실무회의가 모멘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따라서 6자회담 비핵화 협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멘텀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6자가 수개월 안에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안보 원칙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전망이다.

● 潘 총장 특사 방북추진..北 “때가 아니다”(2/22)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 성격을 띤 유엔 고위 관계자 일행이 최근 북한 방문을 추진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린 파스코에 사무총장 정치특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오는 3월 초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측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파스코에 정치특보는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급 고위 인사이며, 반 총장의 정무 분야를 총괄 보좌하는 인물로 그의 이번 방북 추진은 반 총장이 최근의 한반도 긴장상태와 관련해 직·간접적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북핵실무회의, 6자회담 ‘동력’ 제공”(2/20)

- 이틀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산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20일 공전 중인 6자회담의 ‘모멘텀’을 되살리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 속에 막을 내렸음. 6개국 실무그룹 대표들은 20일 오전(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마지막 날 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초안을 마련해 회람시킨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2차 초안에 대해 최종 점검을 했음.
- 각국은 전날 ‘기본원칙’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밝혔고 의장국인 러시아가 이를 취합해 이날 다시 각국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음.
- 회담에 참석한 한 외교 소식통은 “당사국 모두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핵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면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6자 수석 대표 회의 이후 공전하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라고 밝혔음. 그는 또 “기본 원칙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문에 대한 당사국의 일반적 이해가 성립되는 등 회담은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다른 어느 국가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러시아서 6자 동북아평화안보회의 개막(2/19)

- ‘2.13 합의’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개 실무그룹 회의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19일 오전(현지시간) 의장국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작됐음. 지난 2007년 3월 베이징(北京), 같은 해 8월 모스크바 회의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 6자회담 틀 속에서 역내 다자안보 문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기본원칙에 대한 협의를 벌이게 됨.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첫날 회의에서는 양자 회담과 함께 실무그룹 대표단 전체가 참석하는 총회가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외무부 본부 회의실에서 오후 2시까지 전날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점검하게 됨.
- 각국 수석대표로는 러시아의 로기비노프 대사를 비롯해 한국의 허 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북한의 정태양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미국의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중국의 양허우란



(楊厚蘭) 한반도 담당 대사, 일본의 마사후미 이시히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했음.

● 러시아서 19일 북핵 6자 동북아안보회의(2/18)

-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첫 6자 회동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북핵 6자회담 산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 의장국인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제3차 실무회의가 19~20일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과 외무부 본부 건물에서 각각 열린다.”라고 밝혔음.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초안을 마련해 회람시킨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2차 초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됨.
- 러시아는 해상 조난 구조 및 테러 대응 등에서의 협력과 같이 6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본원칙’이 채택될 경우를 가정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이번 만남은 회담 의제 못지않게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미의 북핵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우리 측에서는 허 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에서는 알렉산더 아미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할 예정.
- 또 북측 수석대표로는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던 정태양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대표로는 최근 한반도 대사로 임명된 양허우란(楊厚蘭) 전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6자회담 무대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 예정.

● 클린턴 “北미사일 6자회담 의제화하겠다”(2/18)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발행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도발적인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적이 무엇이든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그동안 6자회담에서는 미사일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 그는 이어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차단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재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있는 국가는 합의를 따른다”며 야당에 대해서도 양국간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
- 앞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대표는 17일 밤 도쿄의 한 호텔에서 클린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따르는 종속 관계가 돼서는 안된다”며 ‘대등한 미일관계’를 주장한 뒤 주일미군 재편에 대해 “세계 전략을 함께 논의해 합의를 이룬 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그간 일본 정부가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 클린턴 장관은 또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권의 대북정책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다. 최종적인 정책은 6자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했다”며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6자회담과 직접 대화를 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음. 아울러 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파트너와 긴밀히 연대해야 하며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클린턴 “목표는 북한 비핵화”(2/17)

-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근거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게 됐다고 비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음.
- 국무부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시아 순방길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이는 북한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설명하고,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이 핵폐기보다 북한이 확보한 핵무기나 핵물질, 핵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둔 ‘안전한 북핵관리’에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됨.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핵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HEU)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지 등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폐기됐음을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HEU문제도 규명할 것임을 밝혔음. 그러면서도 클린턴 장관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HEU 의혹을 근거로 지난 1994년 북미간에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선 비판했음.
- 그는 정보기관내에서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논란이 있지만 제네바합의가 파기되자 북한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했다는 데는 논란이 없다면서 “그 결과 그들(북한)은 예전에 갖지 못했던 핵무기들(nuclear weapons)을 지금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은 이미 지난 2007년 합의에서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그들이 의무를 완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핵폐기



및 비핵화를 위해 나아가면 우리는 북한과 협력할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음.

- 특히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협력 범위에는 외교는 물론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조약, 양자관계 정상화, 식량·연료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비확산 합의이행이 조건임을 분명히 밝혔음.

● “日-美, 北 비핵화 계속 압박”(2/17)

- 일본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비핵화 압력을 계속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16일 밝혔음. 이 관계자는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 협상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공동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 이들은 또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을 비춰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힐 차관보는 오는 17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를 면담하기로 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北 내달 선거 후계구도 단서 제공”<FT>(2/21)

- 다음달 8일 실시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후계 구도와 관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1일 보도.
- 신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후계구도 소문들이 무성한 가운데 이번 대의원선거는 김 국방위원장의 권력이 어디로 향할 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했음.
- 건강이상설이 나돌던 지난해 가을부터 연기돼온 이번 선거를 지금 시점에서 실시기로 한 결정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시키고 권력구조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신문은 풀이했음. 그러면서 신문은 만일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명이 이번 선거를 통해 대의원직을 차지한다면 그가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음.
- 정보기관들은 장남 김정남과 3남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목해왔으며 김정남은 후계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의 시선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에 쏠려 있는데 그는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 시기에 후계 구도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신문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전하며 북한 후계구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행정부의 우려



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음.

- 클린턴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행 기내에서 “권력 승계가 일어나면 그것이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북한 내부에서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도발적인 행위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권력 내부에)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음. 신문은 북한이 장자승계 전통을 지닌 유교 사회이지만 후계설은 김 위원장이 김정운을 선호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 이 같은 추정의 근거 중 하나는 김정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김영춘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음. 신문은 또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한국 언론에 김정운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고 전하면서 김정운 후계설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 “北 수일내 미사일발사 준비완료 가능성”(2/21)

- 세계적인 군사컨설팅 업체 제인스 그룹이 발행하는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일 “무수단리(함경북도 화대군 소재)의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이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이달 안에 미사일 발사준비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현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 미사일 발사 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보조 운송기구 및 트럭들이 여러 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물론, 원격 계측기 및 레이더 설치 작업 정황도 포착된 것. 이 잡지는 또 무수단리 기지의 미사일 발사대 및 엔진 테스트 시설 인근의 활동도 최근 확대됐다면, 18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시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미사일의 기종은 ‘대포동 2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음.

● 美국무부 “보즈워스, 성 김과 협력”(2/21)

- 미 국무부는 20일 대북특사로 임명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가 성 김 북핵 특사와 북핵 문제 전반에 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일상적인 접촉과 의논을 하게 될 것이고, 보즈워스 특사는 미국 국무부의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을 조정하는 일을 맡게 된다”고 말했음. 두기드 부대변인은 또 보즈워스 특사가 터프츠대의 법학, 외교 전문대학원인 플래처 스쿨 학장직을 계속 유지하되, 국무부에 사무실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타임(full-time)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보즈워스 대사에게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6자회담에서 이뤄질 미국의 노력을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보즈워스 특사



는 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며 고위급 특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은 물론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고위급 접촉을 촉진하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성 김 특사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혀 보즈워스 특사 임명을 계기로 종전보다 고위급 접촉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음.

● 클린턴 “北HEU, 비핵화 걸림돌은 안돼”(2/21)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우리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파악해야겠지만, 이 문제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불능화하는 노력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미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HEU와 관계된 것이 북한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수입됐는지는 우리가 북한에 조사단을 보내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며 “그러나 이 문제로 플루토늄에 대한 우리의 통제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은 “HEU를 연구한 많은 사람은 (북한에)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구체적인 장소는 물론 구체적인 결과를 꼬집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클린턴 北후계구도 언급 금기 깨” <NYT>(2/21)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외교관들이 북한의 후계구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금기(터부)를 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
- 클린턴 장관은 19일 방한에 앞서 서울행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북한 지도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었음.
- 신문은 이 같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과 관련, 이것이 중국과 같은 6자회담 당사국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초보자로서의 실수인지, 아니면 지난 8년간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뒤흔들기 위한 접근법인 신선한 솔직함을 보여준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체제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면서도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말 의미 그대로 두고 싶다”며 “그는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었음.

● 클린턴 오늘 訪中…6자회담 재개 논의(2/2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금융위기 공동 대처 방안 등을



논의.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 방문을 마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저녁 아시아 4개국 순방 마지막 기착지인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국제 공항에 도착, 2박3일간의 공식 방중 일정을 개시.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은 21일 닌타오(釣魚臺)에서 중미 외교장관 회담을 거행하고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 클린턴 장관은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을 면담하며 일요일인 22일 오전 하이톈(海澱)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중국 여성계 대표들과 면담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

● “美, 힘과시 의지 충분..北이 시험할 경우”(2/20)

-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북한이 미국을 시험하려 한다면 “현명치 못하다”고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강조했다.
-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리비어 회장은 20일 오전 안보경영연구원이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과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오바마 신행정부는 첫 몇개월간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기에 미국을 시험하려들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 리비어 회장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미국 스탠퍼드대가 수주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정책보고서를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핵확산 우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양보하면 북한이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큰 양보안을 담은 포괄적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 외에도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이 방법이야말로 “북한의 핵심 국가안보 사안을 좌우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대면해 미국 대통령의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美, 北과 ‘先평화 後비핵화’ 모색해야”(2/20)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2명이 주장했다. 미국의 한국정책연구소의 폴 리엄 소장과 크리스틴 안 특별 연구원은 20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등 대북 관계에 관해선 전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



했음.

- 이들은 최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의 발언을 인용, “평화협정은 북한의 정통성 및 생존권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관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핵무장 해제를 먼저 요구할 게 아니라 과감히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할 것을 촉구했음. 또 클린턴 정부 때 이뤄진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북미간 평화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핵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다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는 점을 주시킴으로써 오바마가 부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北, 올해 외부 식량 179만t 도입 필요” <FAO> (2/20)

-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북한은 오는 10월까지 총 178만6천t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밝혔음. 20일 FAO가 최근 발간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는 지난 2년간 북한의 곡물 수확이 급격히 줄어 심각한 식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음.
- FAO는 올해 곡물 회계연도(2008년 11월-2009년 10월)에 북한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178만6천t의 식량 가운데 1월 중순 현재 45만t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134만t을 추가로 지원받거나 상업적 거래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작성한 첩보박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지난해 곡물회계연도(2007년11월-2008년10월)에 총 77만t을 수입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한다 해도 외부에서 57만t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추산했음.
- 한편 통일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는 548만t인 데 비해 전년도 생산량은 431만t(도정 후 기준)이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17만t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北후계위기 클린턴 발언 국무부 견해” (2/20)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직전 서울행 기내에서 북한이 조만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무부는 19일 국무부의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미 국무부가 김 위원장 건강상태와 후계구도 등을 둘러싸고 북한의 상황이 예상보다 긴박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체



제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면서도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말 의미 그대로 두고 싶다”며 “그는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北상황 불투명..후계위기 우려”(2/19)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북한 지도부의 상황이 불투명하다면서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이 조만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을 순방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발 서울행 비행기 기내에서 미국 정부는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북한 지도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특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후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등 많은 우려에 직면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비핵화와 핵확산금지과 관련한 논의들이 정상화 되찾도록 미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클린턴 장관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리들의 북한 관련 논의를 염두에 둔 듯 “모든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권력 교체가 있을 경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사회 내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자극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美정부, 北 인권문제 모른척 말아야”(2/19)

-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연일 미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음. 북핵 문제에만 매달려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이슈의 하나로 다뤄야 한다는 것.
-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최근 동북아 순방길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순방 기간에 북한에서 널리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과, 북한 인권 문제가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클린턴 장관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20만명의 북한인 및 중국에 머물고 있는 수만명의 탈북자들을 잊지 않도록”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음.
- 데이비드 호크 전(前) 국제 앰네스티(AI) 미국 지부장 역시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본 적이 없다”며 오바마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음.

● “오바마, 북핵 포괄적 해결 추구해야” <보고서> (2/19)

-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18일 발표한 ‘미국의 새 대북 외교전략’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포괄적인 해법은 비핵화 협정과 더불어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과 북·미관계정상화, 군사 문제에 관한 남북한과 미국간 3자 협정,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한 남북협정 등 일련의 협정들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보고서는 특히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안보,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협상을 병행해야 비핵화 합의가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차원에서 안보, 정치, 경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과 미국이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 관계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2000년 10월 ‘공동 코뮈니케’를 재확인할 것 등을 권고했음.
-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급한 과제들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핵 문제’를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음.
-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는 새 외교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이 보고서에는 제임스 굿비 전 국무부 핵안보대사와 도널드 그로스 전 국무부 군비통제 담당 선임고문, 존 박 평화연구소 연구원, 앨런 롬버그 스티븐슨센터 선임연구원,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조지프 스나이더 애틀랜틱 카운슬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이 참여했음.

● “美, 北 미사일 발사해도 대화 계속 전망” (2/19)

- 북한이 미국의 경고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공개 규탄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려 할 수도 있으나 북핵 6자회담의 지속을 위해 북한과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앤드루 세멀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전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했다.
- 세멀 전 부차관보는 18일 미국 워싱턴의 세계반테러협력센터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란과 함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항상 미국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의 대책과 관련,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미사일 발사가 테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정식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좋은 생각”이라며 “계기가 어떻게 한국의 참여는 PSI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를 순방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핵을 포기하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는 클린턴 장관이 “한편으로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열린 대화와 북한이 고려할 만한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 “北HEU 정보사항 논평 않는게 관례” <미국무부> (2/19)

-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에 앞서 제기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에 대해 정보와 관계된 사항은 논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부근에서 우라늄 핵시설을 가동해왔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보와 관계된 사항은 관례적으로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대신, 두기드 부대변인은 “미국은 아직 6자회담 과정과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음. 북한의 HEU에 대한 국무부의 이 같은 논평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고 클린턴 장관이 한·중·일 순방을 통해 최종 방향을 정하려는 상황에서 비롯된 신중한 반응으로 풀이됨.

● “北미사일발사 선제타격 준비해야” <美교수> (2/19)

- 필립 젤리코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띄운 글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시스템 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정책고문을 지낸 젤리코 교수는 이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손에 넣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지구



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역지력을 시험하는 도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면서 미국은 이제 북한이 선을 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정부 내 고위급 토론과 동맹국 협의를 거쳐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미사일 선제공격 계획을 흘리면서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켈레코 교수는 강조했다.

- 그는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미사일 장착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분명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켈레코 교수는 미국이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면 잠재적인 미사일 개발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볼턴, 클린턴 북핵인식 비판(2/19)

- 미국 내 보수강경파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 핵프로그램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볼턴 전 대사는 1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기고를 통해 클린턴 장관이 북핵프로그램을 ‘동북아 안정의 가장 민감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 러나 이런 목표 설정은 북핵프로그램이 ‘평화적’일 때 그것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형태이든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놔두면 언젠가 그것을 오용하거나 우리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시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볼턴은 클린턴 장관이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특히 중동지역에서 핵과 탄도탄 미사일을 확산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우리농 농축활동에 관한 ‘정보’와 함께 북미 제네바 합의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됐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아주 놀랄 정도로 잘못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볼턴은 북한이 그동안 제네바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북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계속 의심하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검증을 하지 않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 장관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이중행동을 미 국무 부보다 더 잘 인식하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바란다



● “美 민간단체들 대북 지원 계속” <VOA> (2/18)

- 미국 민간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 의료, 식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 월드비전은 황해북도 연탄군 도치리에 설치한 태양열발전기 사업 대상을 칠봉리 등 인근 마을로 확대했으며,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에 있는 라면 공장과 두유 제조공장에 올해 첫 지원분 밀가루를 보냈다.
- 빅터 슈 월드비전 북한사업국장은 “이달초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 황해북도 연탄 등을 방문, 지난해 지원한 물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밀가루와 의약품, 내복 등 월드비전의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올해 새로운 지원 물품이 한달정도 후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OA는 전했다.
- 13년째 대북 지원을 진행 중인 아메리카 케어즈는 올해 2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보건의로 교육을 위해 의료용 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내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지원 사업에 앞장서 온 유진벨 재단은 북한 결핵 환자들의 치료와 인민병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방북 지원 활동을 계획 중임.

● 클린턴 “美, 北주민에 적대감 없어” (2/18)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시아 4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가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적대감을 통해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하게 핵프로그램의 제거한다면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혜택은 북한의 약속이행에 따른 대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클린턴 장관은 N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기다려 보자. 실제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 “對北정책 최종목표 비핵화” <미 국무부> (2/18)

- 미 국무부는 17일 대북정책의 최종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임을 거듭 재확인했음.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이 우리 정책의 기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음. 이어 두기드 부대변인은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90년대 시작한 2기의 경수로 건설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지와 관련해 “대북 정책을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 두기드 부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단호한 경고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성명에 대해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6자회담의 과정을 변화시키거나 6자회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는 “그들의 특별한 준비 상황에 대해 말해줄 정보가 없다”고 말했음. 이와 함께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이 아닌 양자회담을 통해 협상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클린턴 국무장관이 6자회담을 직접 언급하며 매우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로 답변을 대신했음.

● 해리슨 “美 북핵정책, 무시 혹은 제한으로” (2/17)

- 북한이 핵무기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협상과 적대를 모두 포기하는 ‘선의의 무시’나 핵무기 수를 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의 2가지 대안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고 셸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이 밝혔음.
- 해리슨 국장은 17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30.8kg의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는 대신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는 등 상응하는 활동을 하는 ‘대타협’을 지난달 방북때 제안했으나 북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이같이 제안했음. 그는 ‘선의의 무시’가 지속적인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면서 ‘정권교체’라는 말까지 나왔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가능하다고 풀이한 해리슨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발적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협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끝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음. 이어 그는 북한에서 보유하는 핵무기 수를 4~5개로 제한하기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이 두번째 대안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 경우 북측이 영변의 플루토늄 제조용 원자로를 불능화하는 대신 미국이 중유 20만t을 북측에 지원하고 이후 영변 원자로 해체 조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리스 국장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 해체 조건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시작된 경수로 2기 건설을 완료하고 핵무기 부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사찰하는 등 까다로운 내용들을 제시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북한이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을 이었음.

● “北종교자유 비판한 美선교단체 방북”<VOA>(2/17)

- 이달 초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7년 연속 선정한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 도어즈’의 실무자들이 최근 일반 관광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했다.
- 이 단체의 린지 베시 씨는 VOA와 인터뷰에서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했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입국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며 “관광비자를 받는 것부터 들어가고 나오는 데 문제가 없었고, 일부 장소에서는 기도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평양에 도착한 뒤 북한 당국이 일행의 비자와 여권, 귀환 항공권을 임시로 압류해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에 들어왔구나”라고 느꼈다면서, 이번 방북의 목적은 “북한에 대해 듣고 읽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린지씨는 방북 기간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를 방문했으며, 북한에는 개신교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천주교 성당, 러시아정교회 등 4개의 교회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봉수교회의 경우 예배당 안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이 모두 한글과 영어 번역본이었으며, 벽에는 카메라 3대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지하교회 확산을 정권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박해”하고 있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지하교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종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을 호소했다.

● “클린턴 北에 부드러운 논조”<NYT>(2/1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북한에 더 부드러운 논조를 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 신문은 첫 순방국인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클린턴 장관이 미국은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한다면 매우 관대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클린턴은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고 비핵화를 하는 쪽으로 향한다면 미국의 입장은 북한과 함께 일



하는데 매우 관대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단지 외교적인 면 뿐이 아니며, 미국은 식량과 연료는 물론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도울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지난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도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신문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할 경우 경제 지원과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논조는 이전의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 간에 세계 경제위기나 기후변화에 관한 연대를 구축하려는 클린턴 장관의 순방에 북한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호전적인 발언을 해왔고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전했다.

● 클린턴 '부시 제네바합의 파기' 비판(2/16)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의혹 정보를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1994년 제네바 합의 파기의 구실로 삼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6일 보도.
-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선 클린턴 장관은 동행 기자들에게 2002년 당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도 의혹으로 제기된 위협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비밀 프로그램이 제네바 합의 폐기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만큼의 증거도 결코 없었다고 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합의의 틀이 파기된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HEU 프로그램과 관련해 클린턴 장관은 정보기관 내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하고 "합의된 틀이 파기되자 북한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했고 (북한이 걸었던) 모든 것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전에 없었던 핵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을 인용,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최대 2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으나, 2002년 이후 그 수는 12기 이상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비밀 프로그램이 제네바 합의파기의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관



리들은 여러 정보기관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 개발 범위에 관해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주북 中대사, 김정일 방중 3돌 기념연회(2/22)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3주년을 맞아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21일 주북 중국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 연회에는 북한 측에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광호 노동당 부장, 김태종 노동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 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음.
- 류 대사는 연설에서 올해 “중조(중국-북한) 친선의 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최태복 비서는 올해 양국의 친선이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北-中, 이달말 문화교류계획 서명(2/20)

- 북한의 대외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대외문화 연락위원회의 문재철 위원장대리는 19일 북한과 중국은 조만간 베이징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뤄질 양국 문화교류계획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철 위원장대리는 이날 북-중 문화협력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주북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양국 문화 교류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문 위원장대리는 이달 말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 올해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
- 류샤오밍(劉曉明) 주북한 중국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북-중은 작년 문화·교육·스포츠·보건 분야에서 모두 68건의 상호 교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올해는 양국 문화교류협력이 더욱 빈번해지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해방군예술단, 북한만경대학생소년예술단 등 양국 최고 수준의 공연단들이 상호 방문하고 수교기념일(10월9일)을 전후해 평양과 베이징에서 기념행사, 영화주간 행사가 벌어지고 기념우표도 발행되며 도서전, 미술공예전 등도 열림.

● 中외교관 “탈북자 처리 잘되고있어”(2/19)

- 웨일린 황 주미 중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은 18일 “중국내 탈북자 처리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을 못느끼고 있다”



고 밝혔음. 왕 공사참사관은 이날 미 상원 건물에서 열린 한미문제 연구소(ICAS) 주최세미나에서 “탈북자들은 중국내 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는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 왔기 때문에 ‘난민(refugee)’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또 그는 지난달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은 새해 초 전통적으로 사절단을 북한에 보내왔다”며 “그것은 하나의 전통”이라고만 언급했음. 그는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 中외교부, 북한의 미사일 준비 우회비판(2/17)

-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대화와 평화의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 즉답은 피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은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함께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유관 당사국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한다고 말한 바 있음.
- 베이징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까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중국은 자국의 체면이 상당히 구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中 ‘우호의 해’…양국서 개·폐막식”(2/16)

-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의 해’인 올해 연초와 연말에 각각 베이징과 평양에서 양국 당과 국가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폐막식을 개최해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지속·발전을 다짐할 것이라고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가 16일 보도. 류샤오밍(劉曉明) 주북한 중국대사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국제선구도보의 평양특파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일정을 밝혔음.
- 류 대사는 개·폐막식과 함께 ‘북-중 우호의 해’ 3대 행사 가운데 하나



인 오는 10월 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 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는 베이징과 평양에서 각각 별도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라. 일·북 관계

● “김현희-北납치피해 유족 이달말 면담”(2/22)

-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씨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 가족 간 면담이 이달 말께 한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달 말 부산에서 김씨와 다구치씨 가족의 면담 방안을 놓고 한국 정부와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 다구치씨는 22세이던 1978년 납치된 이후 김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쳤으며,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음. 김씨는 지난달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구치씨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다구치씨 가족도 김씨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가 면담을 위한 조정을 벌여 왔음.

마. 기타

● “北주민 자유시장 제한에 반발” <美紙>(2/21)

- 북한 당국이 일부 허용해온 자본주의식 자유 시장을 최근 제한하려 하자 북한 여성을 포함한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고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0일 전했다. USA투데이는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발언에 근거, 자유 시장 체제에 적응해온 일부 북한 상인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본주의식 시장 체제를 제한하려는 조치에 대해 ‘반란’ 조짐까지 보였다고 보도.
- 비영리 북한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 에리카 강 소장은 “북한 당국의 시장 제한 움직임에 북한 여성 등 사람들이 지금 반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선 기근 사태를 불러온 식량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내부적으로 배급 체제와는 다른 공개 시장이 급속도로 퍼졌음.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장 체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열리던 사설 시장을 한 달에 3일로 제한하려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최소한 올해 중반까지 통제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음.
- ‘좋은 벗들’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제한하고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했지만 북한의 항구 도시인 청진 등지에서 젊은 여성 수천명이 ‘전례없는’ 시위를 벌이는 사태로 먼저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북한내 시장에선 중국과 한국 등에서 불법 복제된 CD와 DVD 등이 대거 들어와 유통됐고 북한 어린이들이 남한의 연예계 스타에 심



취하고 시작했으며 포르노와 금지 영화가 담긴 USB가 북한내 최고의 선물로 부상했음.

- USA투데이는 “북한의 일부 상인이나 주민들은 자유 개방 시장 체제의 ‘달콤한’ 맛을 알게 됐고 사유 재산을 모으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북한 고위층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 北, 중국서 낙타는 왜 수입? (2/19)

- 19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遼寧省)의 항구도시 다롄(大連)에 위치한 한 동물원이 들소의 일종인 야크 두 마리와 낙타 네 마리를 최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신화통신은 “이런 야생동물이 다롄이나 랴오닝성에서 북한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만 간단히 전할 뿐, 구체적인 북한 내 수출목적지와 왜 북한이 이런 동물을 필요로 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궁금증이 일고 있음.
- 우방 관계였던 중국과 북한은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면서부터 급속히 냉각된 상태지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하면 자국과 북한 접경 지역의 대혼란을 우려, 북한에 에너지와 식품 원조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음.

● “北 마약밀매 2002년 이래 중단” <유엔간부> (2/19)

- 북한 당국이 지난 2002년 이래 마약밀매를 중단했다는 평가가 유엔 고위간부에 의해 나왔음. 유엔 마약범죄국(UNDOC)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국장은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이 주요 마약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관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면서 “(그런 관행은) 지난 2002년 이래 중단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했다. 유엔 고위간부가 북한 당국의 마약밀매 중단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 북한은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다른 국가들의 주요한 마약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음.
- 코스타 국장은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을 위조지폐 같은 다른 수단으로 바꿨음을 시사했음. 그는 “(북한이) 불법 상품, 담배, 위조통화 등을 밀매하고 있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고 밝혔음.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마약단속 노력이 강화됐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 당국의 마약밀매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음.
- 코스타 총재는 북한과 마약단속 협력을 위해 올 연말께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불법 운송을 금지하는 유엔 협약 등 마약밀매 금지와 관련한 3개의 국제 협약을 지난 2007년 비준했음.



● “유럽기업단 방북, IT·농업투자 모색” <RFA> (2/18)

- 유럽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 사업단이 오는 5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유럽 사업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올해는) 더 다양한 나라와 분야의 기업들이 동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정보기술(IT)과 농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북한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 유럽간 긴장은 없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사업체가 진출하는 데 영향은 없다”며 “지난해 방문 때도 그랬지만 북한 당국은 유럽 기업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 5월 평양에서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박람회가 열릴 예정.
- 지난해 10월 방북했던 유럽사업단중 일부 기업은 휴대전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북한측과 맺고 사업을 확대했으며, 다른 기업은 북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섬유와 의료품을 생산하는 등 북한에서 활발히 사업하고 있다고 RFA는 소개했다.
- 방북에 앞서 내달초 네덜란드의 헤이그상공회의소는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행사에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

● “北, 아리랑 8~10월 공연” <美여행사> (2/17)

-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이 올해는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린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뉴코리아 투어즈’가 밝혔다. 앨라배마주 매디슨에 있는 이 여행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한 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북한측으로부터 이러한 공연 일정을 들었다고 말했다.
- 17일 여행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아리랑 공연기간에만 북한 당국에 의해 북한 관광이 허용되며, 지금까지 2002년, 2005년, 2008년 3차례 걸쳐 약 600명이 관광목적으로 방북했다. 여행사측은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적극 권유했으나 한국 국적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柳외교, 美하원 대표단 초청 오찬(2/1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방한 중인 아이크 스킨턴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미 하원 대표단을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오찬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노력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전략동맹 발전 및 북핵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 미 의원단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전폭 지지하고 미 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북핵 및 대북정책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FTA 등 양국간 현안의 원활한 진전을 기대했다”고 문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날 오찬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참석했다.
- 해외 주둔 미군기지 시찰 등을 위해 18일 입국한 미 의원단은 하원 의원 10명과 관련 의회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예방과 이상희 국방장관 면담, 김학송 국방위원장 주관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내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로 떠날.

● “韓, 국방비 증가액 사회투자로 돌려야” <美 전문가>(2/19)

- 한국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한 국방비의 지출을 더 늘리는 대신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페러 미국 정책연구소 국장이 주장했다. 그는 18일 (워싱턴 현지 시간)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한국 정부의 새 국방 예산 지출의 경제적 파장’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방개혁 2020’을 기초로 한 한국 정부의 국방비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전했다.
-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 햇볕정책으로 지금과 달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적었는데도 국방 예산은 계속 늘려왔다며 그 결과 1988년 약 120억달러이던 국방예산이 2007년 약 230억달러로 늘어난 것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만큼 국방예산을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는 군사력이 아닌 명예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녹색성장’에 한국 정부의 투자가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군은 영양실조와 에너지 부족으로 전력이 최악의 상태여서 이를 대신하기 위해 핵무기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미, 내달초 ‘키리졸브’ 군사연습(2/18)

-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작전연습인 한·미 ‘키리졸브’ 연습이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18일 밝혔음. 이번 연습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2만6천여명이 참가한다. 핵추진 항공모함도 동해 상으로 출동할 예정.

- 연합사는 한반도로 전개될 항모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조지 워싱턴호’(9만7천t)일 가능성이 커 보임. 조지 워싱턴호는 비행갑판 길이가 360m, 폭은 92m에 달하며 각종 안테나 등이 설치된 돛대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1m에 이른다. 면적이 1만8천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투기,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66대를 탑재하고 있음. 4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있음.
- 연합사 관계자는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가운데 1만여명은 항모에 대기하는 병력”이라고 말했음. 이번 연습 기간에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oal Eagle)도 실시되며 한국군은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가 참가함.

● “한미정상 4월 첫 단독회담 가능성”(2/17)

- 오는 4월초 영국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경제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측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미국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이 관계자는 그러나 “런던에서의 양자회담은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미국측도 협의해 보자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말했음.
- 그는 “이번 방미기간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미국측도 우리나라가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미국측에서 이와 관련한 내부 토론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특히 현재의 군사동맹 위주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비확산, 대테러 대응 등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동맹으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외교장관, 25일 중국서 회담(2/19)

- 외교통상부는 1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4~25일 중국을 방문,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신고) 마무리를 앞두고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 장관은 방중기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면담할 계획.

● 中학자, 김정일 건강악화 언급 뒤 연금(2/19)

-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린 뒤 연금 상태에 놓였다고 현지 소식통이 19일 전했다. 사회과학원 산하 일본연구소의 진시더(金熙德.55)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연금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를 봤지만 그러한 일이 실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에도 능통한 진 연구원은 연지(延吉) 출신으로, 연변대를 졸업하고 도쿄대와 코네티컷대 등에서 수학했음.

● “中, 北정보 한국유출혐의 국책기관 간부 구속”(2/17)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측에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 간부를 구속하고 외국 대사관이나 언론인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북한 관련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구속된 사람은 중국 사회과학원 간부로 한반도 정세나 중일 관계 등 중국 내 동아시아 연구의 1인자. 그는 중국의 대일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내외의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지만 지난달 하순부터 모습을 감췄음. 복수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간부는 1월 하순 수사 당국에 구속됐음. 그는 북한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 간부가 정보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사회과학원측은 아사히신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음.



다. 미·중 관계

● 클린턴 美국무, 방중 마무리(2/22)

-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2박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음. 지난 15일 (미국시간) 아시아 4개국 순방길에 올랐던 클린턴 장관은 일본 (16-18일), 인도네시아(18-19일), 한국(19-20일)에 이어 20일 저녁 중국에 도착했음.
- 21일 중국 지도자들의 면담 일정을 바쁘게 소화한 클린턴 장관은 일요일인 이날 오전 하이톈(海澱)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중국 여성계 대표들과 면담하는 것으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날 낮 전용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음.
- 클린턴 장관은 방중 기간 인권, 환율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이른바 ‘구동 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식 접근방식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강화와 금융위기,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 공동 대처기로 합의했음.
-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유지돼 온 전략 대화 및 경제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 확대기로 했음. 클린턴 장관은 21일 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과의 잇따른 면담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의 필요성과 관계 발전을 재차 강조했다.
- 후 주석은 클린턴 장관에게 중·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편리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음. 원 총리도 손자병법의 성어인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는 뜻)’를 인용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 후진타오, 클린턴에 양국관계 발전 강조(2/2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오후 방중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후 주석은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이자 두 나라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면서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심화 발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음.
- 후 주석은 “중국은 미국과 경제·무역, 대테러 문제, 정치·사법, 과학 교육, 문화, 위생, 에너지, 환경보호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 공동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순조



로운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 후 주석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클린턴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클린턴 장관이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 것은 신임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음.
- 클린턴 장관도 앞서 양제츠 외교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의 회담이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중·미간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화답했음.

● 中美 외무회담..관계강화 다짐(2/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양국 간 관계 강화와 금융위기 등 각종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자고 다짐했음. 클린턴 국무장관은 21일 베이징 다폰위타이(釣魚臺)에서 양 부장과 가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은 이미 양국 관계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됐다고 믿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면서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도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인 두 나라가 21세기 들어 일련의 심각한 긴급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미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별도의 정상회담을하기로 합의했음.
- 중·미 양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두 나라가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에 앞장서 나가자고 다짐했음. 클린턴 장관은 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티베트 문제와 대만, 미얀마 문제, 인권 문제, 이란 핵문제 등 각종 논의가 진행됐음. 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동북아 정세의 긴장국면 해소를 위해 협력하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클린턴 “中, 미국채에 변함없는 신뢰”(2/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중국은 미국 국채를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채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 2조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6천 962억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한 나라이지만 최근 미 국채 보유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 양제츠 부장도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미국 국채 구매에 써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외환 운용 과정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당장에 줄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음. 블룸버그 통신은 중·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 시절 유지돼 온 양국 간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이번 회동에서는 티베트 문제와 대만, 미얀마 문제, 인권 문제를 포함해 각종 논의가 진행됐으며 양 부장은 양국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아울러 양 부장은 “클린턴 장관과 회담에서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무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나라는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美·中 이달말 군사회담 재개(2/17)

- 미국과 중국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군사당국 간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16일 밝혔음. 미국과 중국은 국방당국 간 매년 군사회담을 통해 각종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왔으나 작년에 미국이 대(對)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하자 중국이 이에 항의, 이를 중단시켰음.
-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오는 27-28일 이틀간 데이비드 시드니 아·태 담당차관보가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국방정책조정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음.

라. 미·일 관계

● <미일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 요지>(2/1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은 17일 일본 외무성에서 회담을 열어 당초 3월로 조정 중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 다음은 양국 외무장관의 주제별 공동 기자회견 발언 요지.

◇ 미·일 관계

- ▲ 클린턴, 나카소네 = 오는 24일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음. 미·일 동맹 강화에 일치했다. 수시로 전화 회담 등의 방법으로 연락, 협의하기로 했음.
- ▲ 클린턴 = 아소 총리는 최초로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외국 정상임.



세계 경제가 곤란한 가운데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이 협력하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

◇ 대북 정책

▲ 클린턴, 나카소네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불안정 요소가 있음. 북한 핵, 납치, 미사일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지향함.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한·미·일이 더욱 연대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음.

▲ 클린턴 =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 6자회담에 협력할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지에 달렸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그에 상응해 국교 정상화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

◇ 납치 문제

▲ 클린턴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에 있어서 큰 우려라고 이해하고 있음.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회해 개인적 동정, 우려를 전달하겠음.

◇ 주일미군 재편

▲ 클린턴, 나카소네 = 역지력을 보유하면서 주일미군 재편 로드맵을 착실히 시행하자는데 일치했음.

▲ 클린턴 =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 핵 역지를 포함해 관여하겠음.

◇ 파키스탄 문제

▲ 클린턴, 나카소네 = 도쿄에서 파키스탄 지원 국제대회를 여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日아소 이달 방미 24일 정상회담(2/1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은 17일 일본 외무성에서 회담을 열어 당초 3월로 조정 중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기로 합의했음.

- 클린턴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또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면 국교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일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확인했음.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또 두 사람은 이날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 양국간 합의한 일정표를 착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한편 재편의 일환인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했음.

- 나카소네 외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이 최초 방문국



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미·일 동맹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음.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상당한 동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도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아소 총리는 오바마 정권이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라며 “세계 경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세계 제1,2의 경제대국이 협력하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 특히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6자회담에 협력할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지에 달려 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국교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오는 24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4월 2일 열리는 제2차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한편 북핵문제,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美日 외무장관 회담…동맹강화 확인(2/1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은 17일 외무성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동맹관계 강화 방안과 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음.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일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또 오는 4월 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3월 중에 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도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외무장관은 핵 폐기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연대 강화와 6자회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정보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카소네 외상은 핵, 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양국 외무장관은 또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인 주일미군 재편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편 작업의 하나인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 해병대의 광 이전과 관련한 협정에도 서명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협정은 28억달러를 상한으로 하는 일본의 재정 부담을 명시하고 오키나와현에 있는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도 명기하고 있음. 이 밖에도 두 사람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지구 온난화 대책, 소말리아 해적 대책 등의 국제적인 과제에서도 협조기로 의견을 모았음.

- 클린턴 장관은 17일 오후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 히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과 회담하는 데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난 뒤 18일 오전 인도네시아로 향함.

마. 중·일 관계

● 中 군대표단 訪日…다오위다오 문제 논의(2/19)

- 거전평(葛振峰)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이끄는 군 대표단이 동중국해상의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19일 보도.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거전평 부총참모장이 이끄는 중국군 고위간부들이 지난 1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에서 일본 자위대 간부와 국방회담을 갖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다오위다오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4년 10월 이후 4년4개월만임.
-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이번 방문이 양국 국방부간 관계를 증진하고 군사와 안보 분야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이 다오위다오에 대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이 지역의 긴장 국면을 줄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바. 일·러 관계

● 러-일 정상 “영토분쟁 조속히 해결키로”(2/18)

- 러시아와 일본이 양국 간 최대 외교 현안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18일 이타르 타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이날 러시아 사할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조속히 영토분쟁의 해법을 찾기로 했음. 이날 회담은 일본과 한국 기술이 적용된 러시아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준공식에 앞서 열렸음.
- 특히 현직 일본 총리가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이 처음.
- 아소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번 만남이 분쟁 해결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양국 정상은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이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그는 또 “영토 분쟁 협상이 진전되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오는 5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인 푸틴 총리의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의 일본 방문을 바랐었음.

- 쿠릴 열도는 2차대전 종전 직전 옛 소련군이 조차했으며 일본은 쿠릴 열도 4개 섬을 모두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사. 기타

● 말리 외교장관, 22~25일 방한(2/19)

- 목타르 우안 말리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이 22~25일 방한한다고 외교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우안 장관은 방한 기간 유명환 장관과 회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산업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23일 열리는 한·말리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간 통상·투자 확대, IT 및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 개발협력 증진 방안 등이 협의될 예정.
- 아울러 세계관광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한 협조를 비롯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WTO 사무총장 선거는 오는 6월 말리에서 개최되는 WTO 총회에서 이뤄지며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출마하고 있음.

● 한·이라크 24일 정상회담 경협 논의(2/17)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라크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 탈라바니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으로, 이번 방한은 지난 1989년 7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후 이라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건설, 전력, 방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 우리 기업의 대(對) 이라크 진출 확대 및 재건사업 지원 등 상호 관심사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 특히 탈라바니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는 니체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와 이라크의 경제개발 관련 고위 정부관계자 20여명이 수행해 양국 정부간 다차원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방한에 이어 이번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협력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친 러시아 부총리 18~20일 방한(2/16)

- 이고르 세친 러시아 부총리가 한·러 간 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20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혔다. 세친 총리는 방한기간 한승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만찬,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 면담 등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특히 이번 방한에는 에너지부 장관, 국영석유회사와 국영방산회사 사장, 한·러 민간경협위원장 등이 동행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서캅차카 해상유전 공동개발, 원자력 등 에너지 자원 분야의 한·러 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세친 부총리는 이에 앞서 18일 사할린에서 열리는 LNG기지 준공식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해 참석할 예정이며 준공식에는 이윤호 장관과 이규형 주러시아 대사 등도 초청됐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 한국은 사할린2광구에서 생산되는 LNG를 삼성중공업과 대우건설, 풍림산업 등 우리 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한 사할린 LNG기지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연간 150만 톤씩 20년에 걸쳐 도입할 예정.

● 한-아세안센터 내달 중순 설립(2/16)

-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무역 및 투자확대, 관광활성화, 문화교류 등을 지원할 일종의 역내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가 다음 달 중순 설립됨.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한-아세안센터 설립 창립이사회가 3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라며 “작년에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아세안 일부 국가의 비준이 늦어져 3월에 설립된다”고 밝혔다.
- 한-아세안센터는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한국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음.
- 한-아세안센터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활동하면서 일종의 대사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11개국에서 각 1명씩 파견돼 구성된 이사진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됨. 사무국은 서울에 위치함. 일본은 1981년에 일-아세안센터를 설립했고 중국도 중-아세안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센터가 설립되면 ▲아세안국가 수출업자에 대한 한국 내 수입선 소개 ▲상설전시관 운영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투자 안내 ▲아세안관련 포털사이트 구축 ▲정보네트워크 관리·운영 ▲현지 자료 수집 및 무역·투자자료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